

전남도, 무안에 ‘농업 AX 플랫폼’ 구축 본격화

전남도는 국가 농업 AX(AI전환) 혁신 플랫폼과 연계한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사업이 2026년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증액되면서 전남 농업이 미래형 농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반영된 사업은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450억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총사업비 300억원) 등 총 1150억원 규모다. 모두 무안군 일원에 구축될 예정이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드론·자율주행 장비·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이다.

전시·홍보관, 수출상담실, 기업 지원 사

미래 농산업 구조 전환 3대 사업, 정부 예산 1150억 반영

비즈니스·실증센터·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농업 집약발전

무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다목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국내 농업기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K-농업 AX 혁신 플랫폼의 기업지원·수출지원 기능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새롭게 반영된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은 스마트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제 농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시연할 실증형 기반시설이다. 기술 간 연동성 검증, 경

제성 분석, 성능 비교 등을 할 수 있어 기업·농가·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기술 협업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남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의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데이터 등 정밀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문 분석 시설이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준 생육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품종 평가·육종 지원·스마



AX 혁신 플랫폼 조감도

트농업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R&D)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전략 데이터 기반의 검증체계를 활용해 기술 개

석·수출지원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체계가 본격 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농업, 로봇·스마트기계, 에너지 자립형 온실 등을 포함한 미래형 농업 생태계가 전남에서 집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남이 국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구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이번 AX 플랫폼 관련 예산 증액은 전남 농업이 첨단 농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할 기술 혁신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친환경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9일 광주 동구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일력 동구청장과 센터이용 시민 100여명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성과 공유회에서는 쓰레기 감량, 생활폐기물 자원화,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대통령 “정보유출 과태료 강제제조사권 검토”

쿠팡 언급…법제처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제처장에게 “정지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교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5·18 사적지 국가주도 보존·활용 관리 길 트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예산 전액 국비 확보

옛 광주적십자병원 설계비도…사회적 합의 구체화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 등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에 대한 국가 주도 보존·활용의 길이 트였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 1300만원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5·18 구묘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으로, 진상규명 투쟁의 발원지로 꼽힌

다. 전두환 정권의 묘지 폐쇄 시도에도 시민 참여로 지켜낸 대표적 5·18사적지다. 이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가 안장되며 5·18 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이 됐다.

광주시는 이곳을 ‘빛의 혁명 발원지’이자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현재 5·18 민주공원 내 역사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최

종 합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설계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또 다른 5·18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한 ‘생명 나눔의 역사적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로 알려져 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은 국비 50% 지원으로 건물 외관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와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는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 활용 방안은 전문가 컨설팅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에 대한 종합적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적 가치 재조명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5·18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성과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광주 시기업들’서 계속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기술 자체보다 도시·산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교통안전, CCTV 이상행동 감지, 녹조 제거, 정밀 헬스케어, 스마트 축산, 금융 리스크 분석, 도시 공간정보 구축 등 광주의 실증 환경을 기반으로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과 연결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 유치 이후의 정착과 성장까지 관리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AI기업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기술지원, 실증,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난 9월 개관한 첨단3지구 AI집

적단지의 창업동도 67개실 중 31개사가 이미 입주를 마쳤다.

AI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사업화·마케팅·판로, 투자유치, 기업 맞춤형 실증 등 전주기 프로그램도 확대 중이다. AI바우처를 통해 시민·기업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고령자 낙상 예측·교통 혼잡 분석·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생활형 AI 서비스도 도시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

최태조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인프라가 집적해 있고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등 기업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업들이 광주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4·7세 고시’ 차단…‘유아 입학시험 금지법’ 처리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

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사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2030년까지 1조980억원 투입…해양관광벨트 조성

해양수산부가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화를 이끌 핵심 사업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지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 여수는 경남 통영, 경북 포항에 이어 세 번째 지정지로 확정되며 해양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은 지역의 자연·문화 자산을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레저·관광·휴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해수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반시설 확충, 민간 투자 구조,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돌산, 경도, 무술목을 잇는 5개 권역과 2개 관광단지 전역이 ‘가막만 복합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된다. 2030년까지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민간투자 8980억원 등 총 1조98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정사업에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 지원센터 △돌산 우두리 오션 푸드 스트리트 터미널 △경도 복합 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 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 파크 조성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최근 신규 관광단지 승인된 무술목 관광단지과 이미 개발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된다.

해수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 잠재력을 결합해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지평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인이 방문하는 복합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여수·송원근 기자 gnnews1@

